

# 공직선거 후보자의 청렴성은 유권자들의 선택(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19대 총선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Congressional Candidates' Integrity Impact on the Voters' Choice: Case of the 19th General Election

이 선 중(Lee, Sun Joong)\*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ongressional candidates' integrity impact on the voters' choice. To do so, th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h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candidates' party, tax delinquency and criminal history are use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result of the election. The result of analysis, the voters do not choose the factor of candidates' ability and personality but the factor of party. Also, the voters did not seriously consider the tax delinquency and criminal history of congressional candidates in voter decision.

Key words: Political corruption, Voters' choice, Congressional Candidates' Integrity

## I. 서론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주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인 국민의 경우 응답자의 56.6%, 공무원의 경우 응답자의 70.6%가 정치인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 2011).<sup>1)</sup> 그뿐만 아니라 1999년 여론조사와 2009년 등 부패한 직업군을 묻는 질문에 정치인이라는 직업군이 가장 부패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정치인이라는 것이 정답처럼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정치인들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제도적으로 정치부패를 최소화하거나 정치인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의 부패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

\*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1) 2008년, 2009년, 2010년 부패인식조사에서도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로 응답자들은 정치인을 지목했으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장기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분야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자는 정치시스템 진입 전과 진입 후로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김기옥(2001)은 정치부패의 원인을 정치환경적 요인, 정치문화적 요인, 정치제도적 요인으로 정치부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 후라는 것은 정치제도적 요인으로 상정할 수 있고 진입 전은 정치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진입 후는 정치인들이 정치환경이라는 제도권에 진입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며 정치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부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정치인인의 부패를 최소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패를 유발하는 정치체제의 개선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부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자금 실명제, 후원회제도 개선,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당비제도개선,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치제도권의 진입 전을 고려했을 때 부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2012년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로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좀 더 정책능력이 뛰어나고 후보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매우 높은 정치인을 선택한다면 정치 체제 진입 이후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정치부패를 줄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양동훈(2002)은 정치부패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정당, 정부, 국가지도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국민 개인이 유권자로서 이해관계로 인하여 국가조직의 지배적 가치를 왜곡하는 경우도 정치부패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부패에 대하여 개별 국민의 국가가치의 왜곡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개별 유권자인 국민들이 정치시스템에 진입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도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도 있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심판 내지는 부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꼽을 수 있는 것이 2000년에 있었던 총선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이 그 예일 것이다.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 시민사회 운동의 역량이 결집된 운동으로 그 평가는 다양하기 때문에 낙천낙선 운동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심판 내지는 정치인들의 부패 최소화를 위한 운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낙천낙선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부정부패와 관련된 정치인도 선정기준에 있으므로 부패정치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정치인들의 부패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총선 후보자들의 도덕성이나 비리 의혹 등이 마스크를 통해 드러났다. 논문표절 의혹부터 성폭행, 성추행, 허위경력기재, 학력위조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이 있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난 경우에도 이들의 당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 이번 19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이 진행된 의원도 있다. 특히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비리 의혹 등에 대한 폭로와 같

은 네거티브 선거가 진행되는 이유는 오늘날의 선거가 후보자 중심의 선거로 자리 잡고 있고 유권자들은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후보자의 이미지를 후보자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Welch & Hibbing, 1997).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정치인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이 유권자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그리고 없다면 왜 그런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선거기간 동안 의혹이 제기되었던 후보자들의 유권자 선택보다는 19대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유권자의 선택기준에 있어 후보자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경험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선택에 정치인들의 도덕성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작용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에 대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정치부패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정치부패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 개념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영래(2002)는 정치부패를 “정치인들이 공적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이용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이익을 안겨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양동훈(2002)은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인 정당, 정부 국가조직이 부여된 역할과 관계를 수행할 때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조직의 지배적인 가치, 규범, 규칙을 왜곡 무시함으로써 각 조직의 질서와 기능이 쇠퇴되는 현상을 정치부패로 정의하고 있다. 김기욱(2001)은 정치부패의 정의를 위해서는 권력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Braze(1963)가 정의한 ‘권력의 남용’ 혹은 ‘권력의 부정한 사용’을 인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볼 때, 정치부패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패의 개념정의를 토대로 정의하는 접근방식과 권력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들과 관련된 논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정치체제 입문 전과 관련해서 부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결과로서의 부패행위가 있고 그러한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인 연계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을 포함하여 논의한다면 유권자들은 부패한 정치인을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선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유권자가 정치인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고 투표를 통

해 의사표현을 한다면 중국에는 부패한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을 정치체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많은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와 관련된 많은 학자들이 정치부패보다는 행정부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양동훈, 2002)과 정치학적 측면에서는 권력작용이나 정치제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권자들이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고 투표를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투표자선택이론이나 투표행태론 등을 통해 풍부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의 관심도 사실은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인가를 밝히는데 주 초점을 두고 있어 후보자의 개인적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과 관련된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과 유권자의 선택 등에 대한 논의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elch & Hibbing(1997)은 미국 의회 선거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 등이 커다란 정치이슈가 되거나 선거전략인 네거티브 공세로 많이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투표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1982년부터 1990년까지의 선거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패문제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후보자들이 평균적으로 득표할 수 있는 득표율에서 약 10%의 득표율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덕성 논란의 경우 이러한 점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공식적인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후보에게는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cCann & Redlawsk(2006)은 유권자들이 투표에서 부패문제를 고려하는가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정치인에 대해 지난 30년간 냉소적으로 변해왔으며 분명한 것은 부패의 문제가 선거에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부패의 인식에 따라 투표의 중요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지만 일관적으로 부패문제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서 부정부패심판론과 같은 선거이슈가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2. 유권자 선택에 관한 이론적 논의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투표를 통해 정책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혹은 사전적으로 후보자의 도덕성이 취약하거나 부패한 정치인을 걸러낼 수 있는 중요한 행동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도덕성이나 부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

한다면 부패정치인 내지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정치인들을 사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좀 더 깨끗한 정치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선택할 때 후보자들의 도덕성 혹은 청렴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는가에 대한 검토는 정치부패 또는 부패문화와 연계된 유권자 인식 등과 관련된 함의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 출마자의 청렴성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으므로 유권자 선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후보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논의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크게 인지요인(개인접촉, 선거홍보, 언론매체, 선거운동, 이웃과의 대화), 이미지 요인(선거이미지, 후보자 이미지), 결정 요인(정당, 내적외적 요인, 후보자 능력, 후보자 평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송건섭·이부희, 2008).

이갑윤·이현우(2000b)는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요인으로 유권자인식조사에서 인물, 정당, 정책 및 공약 중 인물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13대부터 16대까지의 한국선거연구회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경험적 인과관계를 검증해보면 정당요인이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한 요인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안문석·황민석(2002)의 16대 총선에서의 후보자 득표율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후보자 요인인 전과여부, 병역이행여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실적은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후보자의 청렴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유권자의 선택 시에 큰 고려사항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건섭·이부희(2008)는 2006년 5·31일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요인을 검증한 결과 인지요인, 이미지요인, 결정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은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건섭·이근수(2011)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방자치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한 요인에 대한 중단분석을 한 결과, 공약요인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인물요인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기(2012)는 다른 유권자선택 결정요인연구가 일반적 후보자 선택요인을 대상으로 검증했다면 이 연구의 경우 시장 후보자를 특정하여 상대후보와 비교하여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요인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현직후보의 직무수행평가, 자질평가, 공약평가, 정당일체감 순으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논의한 유권자 선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 시 정당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후보 선택 시 유권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요인들에 대하여 선거직후 한국정치학회가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 1,000명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도덕성이 8개의 항목 (정책/공약, 소속정당, 후보능력, 도덕성, 개인적 연고, 주변의 평가, 기타) 중 4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제5회 전국지방선거에서는 8개 항목 중 5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이현우, 2011).

<표 1>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요인

구분	선택요인		종속 변수	대상선거	조사방법
송건섭·이부희 (2008)	인지요인	개인적 접촉 선거캠페인 언론보도 등 인지수단	후보자 선택	2006년 지방자치선거	대구경북지 역유권자 인식조사
	이미지요인	선거이미지 후보이미지			
	결정요인	정당요인, 인물요인, 공약요인, 외부요인, 후보능력, 후보평판			
송건섭·이근수 (2011)	인지요인	송건섭·이부희(2008)와 동일	후보자 선택	2002,2006, 2010 지방자치선거	대구경북지 역유권자 인식조사
	이미지요인				
	결정요인				
이갑윤·이현우 (2000b)	정당요인	정당소속감	후보 득표율	14대, 15대, 16대 총선	2차 자료
	후보자요인	현직효과, 당적변경, 세대교체, 낙선운동			
안문석·황민석 (2002)	정당요인	지역별 정당 득표율	후보 득표율	16대 총선	2차 자료
	후보자요인	나이, 재산, 납세실적, 현직여부, 낙선대상자 지목여부, 전과여부, 병역이행여부			
김정기 (2012)	정당요인	정당지지	후보자 선택 (당락)	2010년 창원시장선거	유권자인식 조사
	후보자요인	상대적 호감도, 정책공약평가 후보자자질평가			
	유권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주: 요인 중 밑줄표시는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 중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을 표시한 것임

유권자 인식을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살펴보면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 시 인물과 후보자의 능력을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갑윤·이현우(2000b)가 주장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정책/공약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소속한 정당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부분임을 고려할 때, 정책/공약 요인과 정당요인을 단순합을 하면 인물이나 능력과 같은 개인적 자질과 비슷한 비율이 되거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19대 총선 유

권자의식조사에서 후보들의 선거법 준수여부를 투표에 반영하겠다는 응답자들이 전체 응답자(N=1,500)의 83.3%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이러한 점은 후보들의 준법성이나 도덕성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 정도 이를 투표에 반영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 후보선택 고려사항에 대한 유권자 인식

(단위 : %)

선거	선택요인	인물 /능력	정책/ 공약	소속 정당	주의 의 평가	정치 경력	출신 지역	개인적 연고	기 타	무응답	사례 수
제3회 지방선거(2002)		59.7	13.9	8.0	8.0	6.6	4.4	0.5	1.1	1.1	1,500
제4회 지방선거(2006)		35.1	23.7	16.4	7.7	5.4	1.6	0.8	0.3	7.9	
제5회 지방선거(2010)		33.3	29.3	14.6	7.1	3.7	1.2	0.8	0.8	9.3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2004)		41.7	15.2	24.2	6.4	6.6	0.7	0.8	0.9	3.6	
제18대 국회의원선거 (2008)		34.2	30.08	15.8	5.4	4.2	1.1	0.5	1.2	6.7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		30.8	34.0	13.8	7.6	4.4	0.8	1.2	1.7	5.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선거별 유권자 의식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 III. 연구의 조사 설계

#### 1. 변수 선정 및 연구 분석틀

##### 1) 변수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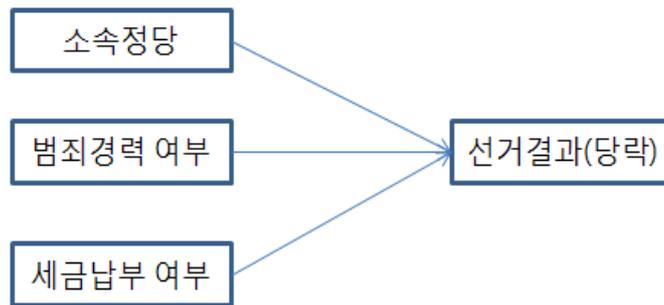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유권자 선택에 결정을 미치는 요인을 변수로 선정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유권자 선택 요인 중 후보자의 도덕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된 연구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분석자료는 각 변수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한 자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등록된 출마자 현황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변수로 선정할 수 있는 성별, 재임횟수, 출

마지역, 출마정당, 출마형태, 범죄경력 여부, 세금납부 여부, 당락 여부, 득표율 등을 변수로 선정하였다.<sup>2)</sup>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는 이론적 논의에서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사하며 기존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연구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연구의 분석틀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 세금납부 여부, 범죄경력 여부가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학술적인 논의를 배제하더라도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언론매체를 통한 지역별 당락을 보게 되면 동서로 지역이 양분되는 양상이 있으며 소속 정당에 따른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마지역을 제외하고 소속정당, 세금납부 여부, 범죄경력여부를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그 외의 변수는 기술통계 및 현황을 설명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림 3> 연구의 분석틀

##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19대 총선출마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출마자 현황 정보를 활용하였다. 선거통계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가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코딩하였다.

2) 범죄경력 여부는 과거의 경력으로 이를 통해 현재 입후보한 후보자의 도덕성 혹은 청렴성이 낮다는 전제는 낙인을 찍는 것과 같으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2차 자료를 통한 분석의 한계로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범죄경력 여부를 후보자의 도덕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범죄경력의 유형인 선거법 위반, 배임 및 횡령 등에 대해서 어떤 범죄가 더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후보자 현황을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로짓분석에서는 범죄경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후보자 등록 이후 성별, 재임횟수, 출마지역, 출마정당, 출마형태 등을 코딩하고 이후 제공된 후보자 약력에서 범죄경력과 세금납부 여부를 코딩하였다. 총선 이후 코딩된 자료의 후보자들의 당락여부 및 득표율을 수집하는 형태로 자료를 코딩하였다.

<표 3> 변수의 범주화(코딩기준)

변수	범주화 기준
성별	남=1, 여=2
재임횟수	첫 입후보=1, 초선=2, 2선의원=3, 3선 의원=4
출마지역	서울=1, 경기인천=2, 3=충청, 4=전북, 5=전남, 6=경남, 7=경북, 8=강원, 9=제주
출마정당	새누리당=1, 민주통합당=2, 통합진보당=3, 자유선진당=4, 무소속 및 기타=5
출마형태	지역구=1, 비례대표=2
범죄경력 여부	선거법 위반=1, 횡령 및 배임=2, 사기=3, 국가보안법 위반=4, 기타=5, 없음=6
세금납부 여부	완납=1, 체납=2, 세금납부 기록 없음=3
당락여부	낙선=0, 당선=1

본 연구에서는 명목변수인 후보자의 당락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독립변수를 출마정당, 출마형태, 범죄경력 여부, 세금납부 여부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명목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에 비연속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도 이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이 없으며 독립변수가 모두 비연속 변수여도 이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한 로짓모형은 일반선형모형의 확장으로 선형회귀모형의 다른 확장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홍세희, 2005). 본 연구의 독립변수가 모두 비연속 변수임을 감안한다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독립변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후보자의 도덕성의 유의미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당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모형과 정당요인, 세금납부 여부, 범죄경력 여부를 투입한 모형과 비교하는 위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변수의 투입으로 인한 모형의 검증력 변화와 변수의 유의미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1. 19대 총선 출마자(표본) 기술통계

19대 총선에 출마한 인원은 총 지역구, 비례대표를 합쳐서 총 1,09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역구 의원에 출마한 인원은 902명으로 나타났으며 비례대표는 188명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 출마자의 일반적 특성을 출마 정당, 지역,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출마인원 중 남성이 전체의 87%인 948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13%인 142명으로 나타났다.

<표 4> 19대 총선 출마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통계량
성별	남	948(87%)
	여	142(13%)
소계		1,090(100%)
출마지역	서울	172(19.1%)
	경기인천	213(23.6%)
	충청	95(10.5%)
	전북	44(4.9%)
	전남	81(9.0%)
	경남	143(15.8%)
	경북	115(12.8%)
	강원	29(3.2%)
	제주	10(1.1%)
소계		902(100%)
출마정당	새누리당	274(25.1)
	민주통합당	247(22.7)
	통합진보당	71(6.5)
	자유선진당	65(6.0)
	기타 및 무소속	433(39.7)
소계		1,090(100)

주: 출마지역 통계량은 지역구 출마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성별, 출마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값임

출마자들 중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인원은 213명으로 전체 1,090명의 약 19.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을 성별, 출마정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19대 총선 출마자의 범죄경력 유형

구분	범죄경력 유형		선거법 위반	횡령, 배임	사기	국가보안법 위반	기타	범죄 경력무
	남	여						
성별	남		27	3	3	69	93	752
	여		2	0	0	9	7	124
출마 정당	새누리당		5	0	0	6	3	260
	민주통합당		6	0	0	41	20	179
	통합진보당		0	0	0	19	19	33
	자유선진당		3	1	1	1	7	52
	기타 및 무소속		15	2	2	11	51	352
출마 형태	지역구		27	2	1	68	77	726
	비례대표		2	1	2	10	23	150
총계			29	3	3	78	100	876

19대 총선 출마자들의 세금납부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19대 총선 출마자 중 세금 체납자는 125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1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금납부기록이 없는 후보자도 30명으로 나타났다. 출마정당을 기준으로 새누리당 후보자 중 12%가 세금을 체납했으며 민주통합당은 8.5%, 통합진보당은 5.6%, 자유선진당 13.8%, 기타 및 무소속 13.4%로 나와 자유선진당 소속 출마자가 세금체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19대 총선 출마자의 세금납부 여부

구분	세금납부 여부			
	세금 완납	세금 체납	납부기록 없음	
성별	남	817	106	25
	여	118	19	5
출마정당	새누리당	238	33	3
	민주통합당	226	21	0
	통합진보당	63	4	4
	자유선진당	55	9	1
	기타 및 무소속	353	58	22
출마형태	지역구	782	98	22
	비례대표	153	27	8
총계		935	125	30

19대 총선 출마자들의 범죄경력 여부와 세금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당락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비교결과는 <표 7>과 같다. 범죄경력이 있는 집단의 후보자 중 약 71.4%가 낙선을 하였으며 28.6%인 50명만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납부 여부의 경우, 세금체납과 세금납부 기록이 없는 후보자를 기준으로 체납한 후보자의 경우 75.5%인 74명이 세금납부 기록이 없는 후보자의 90.9%인 20명이 낙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후보들의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다음 항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7> 범죄경력 및 세금납부 여부에 따른 당선·낙선 결과

구분		당락여부		전체
		낙선	당선	
범죄경력 없음	빈도(%)	531(73.1%)	195(26.9%)	726(100%)
	당락여부의 %	80.9%	79.6%	80.6%
범죄경력 있음	빈도(%)	125(71.4%)	50(28.6)	175(100%)
	당락여부의 %	19.1%	20.4%	19.4%
세금완납	빈도(%)	562(71.9%)	220(28.1%)	782(100%)
	당락여부의 %	85.7%	89.4%	86.7%
세금체납	빈도(%)	74(75.5%)	24(24.5%)	98(100%)
	당락여부의 %	11.3%	9.8%	10.9%
세금납부 기록 없음	빈도(%)	20(90.9%)	2(9.1%)	22(100%)
	당락여부의 %	3.0%	0.8%	2.4%

## 2. 총선 출마자의 도덕성이 당락에 미친 영향 분석

19대 총선 출마자들의 청렴성이 당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그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정당요인인 소속정당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후보자의 도덕성을 측정하는 변수인 범죄경력여부 및 세금납부 여부를 투입하여 모형의 변화를 고찰하여 투입변수의 유의미성을 살펴보는 위계적 분석절차를 이용하였다. 우선 1단계인 출마정당을 투입한 모형을 모형1로 그리고 출마정당, 범죄경력여부, 세금납부여부를 투입한 모형을 모형2로 설정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검증결과에 따라 변수의 유의미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모형의 적합성 검증결과는 <표 8>과 같다. 우선 모형1은 출마정당을 투입한 모

형으로 절편만을 대상으로 한 기저모형보다 모형 1의  $X^2$ 는 351.672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절편만을 포함한 기저모형보다 출마정당, 범죄경력여부, 세금납부여부를 투입한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수의 유의미성에 대하여 모형2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범죄경력여부와 세금납부여부가 출마자들의 당락을 예측하는 변수로서 유의미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 연구의 관심사로 위계적 모형의 경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형1보다 모형2의 적합도가 좀 더 유의미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모형 1은 모형 2에 내재되어(nested)있는 모형<sup>3)</sup>으로 두 모형의  $X^2$  값의 차이를 해당 자유도 차이에서  $X^2$  검증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다(홍세희, 2005).

<표 8> 모형 적합성 검증 결과

구분	$\chi^2$	자유도	유의 확률	-2log likelihood (-2LL)	Cox & Snell $R^2$	Nagelkerke $R^2$	Hosmer & Lemeshow	
							$\chi^2$	유의 확률
모형1	351.672	4	.000	702.785	.323	.469	.000	1.000
모형2	355.245	7	.000	699.212	.326	.472	1.221	.990

위의 설명대로 모형1과 모형2의 차이값은 3.573이고 두 모형의 적합도의 비교값이 된다. 이 값은 유의도 5% 수준에서 자유도 2의  $X^2$  임계치 값보다 낮기 때문에 범죄경력 여부와 세금납부 여부를 투입한 모형이 후보자의 당락을 예측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계적 분석을 통한 범죄경력여부, 세금납부여부를 투입했을 때의 모형이 모형 1과 비교했을 때 모형2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전체 모형에서의 변수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형2의 로짓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로짓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모형의 투입변수들을 살펴보면 소속당은 출마자들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준거기준이 되는 무소속 및 기타정당보다는 기존 정당으로 출마한 출마자들이 좀 더 당선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범죄경력여부는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3) 모형비교 시 경쟁모형이 특정변수들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면 두 모형은 내재된 관계로 내재모형이란 모형 A, 모형 B가 있을 때 모형 A에는 변수가  $X_1, X_2$ 가 있으며 모형 B는 변수  $X_1, X_2, X_3$ 으로 구성되었을 때 모형 A가 모형 B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X^2$  검증을 통해 적합도를 검증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좀 더 간단한 모형 A를 선택해야 한다. 경쟁모형이 내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X^2$  검증 대신 BIC를 이용하여 모형적합도의 차이의 효과크기를 검증한다(홍세희, 2005)

났다. 다만 계수값의 부호가 부의 값이 나타나서 해석에 유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범죄경력이 있는 집단을 기준으로 범죄경력이 없는 집단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범죄경력이 없는 집단의 후보자들이 낙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수의 부호가 부의 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7> 참조). 범죄경력이 없는 후보가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보다 낙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범죄경력 여부가 유권자의 선택기준에 있어서 유의미한 기준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금납부 유무의 경우도 세금체납자를 기준으로 볼 때 출마자의 당락을 결정짓는 변수로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변수의 효과크기는 일반 선형분석에서 활용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아닌 BIC값을 이용하는데 BIC 값은 Wald-InN으로 Wald 값에서 표본크기에 자연로그를 한 수치의 차이로 그 효과크기를 확인한다. 표본수의 자연로그값은 6.805로 소속당은 효과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범죄경력유무와 세금납부여부는 효과크기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자면 19대 총선 출마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당요인이며 후보자요인인 후보자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범죄경력여부와 세금체납여부는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로짓분석 결과

구분	B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소속당			109.702	4	.000	
새누리당	5.064	.597	71.880	1	.000	158.278
민주통합당	4.769	.598	63.681	1	.000	117.757
통합진보당	2.790	.716	15.180	1	.000	16.283
자유선진당	2.018	.832	5.873	1	.015	7.520
범죄경력(무)	-.468	.251	3.473	1	.062	.626
세금납부여부			.080	2	.961	
세금완납	-.061	.312	.038	1	.846	.941
세금납부기록없음	-.244	.962	.065	1	.799	.783
상수항	-4.358	.672	42.112	1	.000	.013

4) BIC를 이용한 효과크기 측정 기준은 Raftery(1995)가 제시하였는데 BIC의 범위를 기준으로  $0 \leq BIC < 2$ 는 작은 효과크기,  $2 \leq BIC < 6$ 은 보통 효과크기,  $6 \leq BIC < 10$ 은 큰 효과크기,  $10 \leq BIC$ 는 매우 큰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홍세희, 2005)

### 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 1) 16대 총선과의 비교<sup>5)</sup>

본 항은 본 연구결과인 후보자의 도덕성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16대 총선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16대 총선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16대 총선 당시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서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부패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헌정과피 반인권전력을 큰 축으로 지역감정 선동행위, 의정활동 성실성, 개헌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조진만, 2001)등으로 본 연구에서의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이라는 것과 유사한 기준이기 때문에 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낙천낙선운동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 등이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낙천낙선운동이 일정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주의적 성격이 강한 곳은 그렇지 못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조진만, 2001; 이갑윤·이현우, 2000a).

이갑윤·이현우(2000a)는 16대 총선의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정당요인, 현직여부, 낙선선정요인을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서울과 경기만을 대상으로 할 때 부정부패나 선거법 위반 요인의 경우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낙선대상자 선정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모형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부정부패나 선거법 위반이라는 낙선선정요인보다는 낙선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득표율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문석·황민석(2002)은 낙선운동 영향력 평가를 선거구별로 낙선대상자에 대해서 선거이전 지지율과 낙선대상자 선정 이후 선거 후의 선거구별로 당락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 지역구를 통해 낙선운동의 효과를 검증한다면 그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의석수로 보면 낙선운동의 효과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후보자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지역별 정당득표율과 현직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05수준) 납세실적은 유의수준 0.1수준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과 여부, 병역이행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요인과 정당요인에 의한 후보자의 득표율에 후보자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들은 그 영

5) 본 연구결과와 16대 총선결과와의 비교는 동일한 대상의 비교기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19대 총선만을 횡단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완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는 데 후보자들의 도덕성 관련 변수의 유의미성에 대한 해석에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도덕성 변수인 범죄경력 여부와 세금납부 여부에 대한 비교는 현행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료 중 세금납부사항, 범죄경력 여부 등은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선거 기간에만 정보가 제공되고 이후에는 시스템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17대, 18대 선거, 19대 선거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점도 고려하였다.

향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우선 안문석·황민석(2002)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정당요인이 후보자의 당락 혹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즉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서 정당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후보자들의 도덕성 변수는 19대 총선에서 당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낙천낙선운동의 효과검증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16대와 19대 총선이라는 시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당요인은 여전히 유권자들의 선택에 유의미한 변수이지만 후보자요인인 후보자의 도덕성은 그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표 2>의 후보자 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한 유권자 인식조사와는 약간 대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인물/능력 요인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범죄경력여부, 세금납부여부와 같은 도덕성 요인만이 결부된 것은 아니지만 인물/능력 요인이 단순한 수치로만 보더라도 매 유권자 인식조사 시 후보선택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들이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는 유권자의 인식이 투표행태로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이나 다른 선택요인에 의해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기진·서상윤·이훈영(2012)은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특성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것이 아니라 직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이미지를 통한 유권자의 선택으로 비정치적인 요인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9대 총선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유권자의 선택: 제도의 문제인가? 문화의 문제인가?

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사실은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 시 후보자 요인인 인물/능력요인보다는 정당요인에 의한 선택을 그리고 인물/능력 요인 중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은 선택기준에서 큰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우선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제도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정치인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투표라는

6) 후보자의 당락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외에 후보자의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별 정당득표율, 범죄경력유무, 세금납부유무를 독립변수로 한 선형회귀분석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후보자의 득표율에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정당득표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범죄경력이 없는 후보자가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자보다 -.082로 나타났으며 세금을 체납한 후보자보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후보자가 .054정도의 크기로 후보자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를 통해서만 그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을 통해 입후보하는 후보들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후보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사실상 선거에서 후보자의 비리나 네거티브 공세로 인하여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건전한 정당구조 하에서 국민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향후 총선에서도 정당요인에 의한 평가가 유권자의 가장 큰 선택기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요인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투표가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정당정치 구조가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수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정당요인에 의한 선택이 유권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사실상 부패를 논의하면서 행정과 관련된 논의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치인들의 부패방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성숙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의 부패에 대해서 “규범적·사회적 전략과 구조적·기술적 전략”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 정치인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의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정치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백완기(1997)는 “우리의 문화는 부패의 균이 서식하기에 비옥한 토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치문화와 부패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사회의 정의 문화, 권력 지상문화, 특수관계를 강조하는 문화,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화, 결과지상주의 문화가 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동훈(2002)은 정치부패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국가의 구성원인 일반국민들도 국민 개인이 유권자로서 개인적 집단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국가조직의 지배적인 규칙이나 가치를 왜곡하는 경우도 정치부패로 정의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정치시스템에 입문하고자 하는 입후보자에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들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부패를 초래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꼭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Welch & Hibbing(1997)은 미국 의회선거에서 부패스캔들로 인해 기소되거나 의혹이 있는 후보들의 75%가 당선된 사실을 상기하면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보다는 자신의 지역구의 혜택이나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훨씬 강력한 선택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이러한 점과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정치인의 도덕성이라는 것이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부패문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V. 결론

본 연구는 19대 총선출마자의 자료를 토대로 정치인의 청렴성이 유권자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말하자면

투표행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한 후보자 선택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대한 요인이 비중 있는 선택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유권자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던 본 연구의 함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선거와 마찬가지로 19대 총선에서도 정당요인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속된 말로 ‘이 지역은 00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식의 인식은 그만큼 어느 정당으로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후보자 정당 공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정무위원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절차를 거친다지만 사실상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도적 검증장치는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각 당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공정한 공천심사 등을 천명한 바 있지만 이후 공천에 대한 끊임없는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또한 공천을 대가로 한 은밀한 뒷돈의 거래 등을 매스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유권자들 후보자의 도덕성에는 관심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후보자 선택 시 유권자들은 다양한 선택기준 중 상대적으로 도덕성 평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후보자와의 친분이나 정당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정책 선호 등의 평가기준이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우선이라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소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식의 말처럼 유권자들이 ‘정치인들 중에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혹은 ‘정치인들이 그 정도 행위는 어쩔 수 없지’라는 식의 인식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부패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여기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유권자의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권자의 입장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 개개인의 선호이므로 그 선택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메니페스토 운동

과 같이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등을 제공하여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유권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면서 향후 후속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적인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덕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선거에서의 투표라는 것은 유권자의 주권행사와 더불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들을 선택하는지를 밝히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권자 선택과 관련하여 투표행위와 연관시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와 결부시켜 후보자의 도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투표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하겠다는 태도와 실제 투표행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이 부패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지와 관련된 특성, 정치성향 등을 변수로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선택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 2>의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시 고려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변수들을 추출하여 개별 요인 중 어떠한 것이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종합적인 논의들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범죄경력이나 세금제납여부에 대해서 사람마다 그 평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범죄경력과 세금납부 여부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패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부패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Redlawsk & McCann, 2005)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나 유권자들의 개인적 속성 등을 반영하고 후보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19대 총선을 사례로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혀보았다. 결과적으로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요인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정치후보자들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도덕성이나 청렴성과 관련된 요인이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의미 있는 선택기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치문화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국민권익위원회. (2011). '11년 부패인식경험 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자료.
- 김기욱. (2001). 정치인의 윤리성 제고방안. 「한국부패학회보」, 5:103-128.
- 김영래. (2002). 정치부패와 정치자금 투명성 개선방안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2:125-142.
- 김정기. (2012). 2010년 (통합)창원시장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분석: 후보자 요인, 정책 공약, 직무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4(1):211-234.
- 백완기. (1997). 정치문화와 부패. 「한국부패학회보」, 1:1-15.
- 송건섭·이근수. (2011). 지방선거와 유권자 투표선택: 중단 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 발표논문집.
- 송건섭·이부희. (2008).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5-30.
- 안문석·황민섭. (2002). 시민단체의 공직후보 낙선운동의 영향력 평가-16대 총선에서의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1(2):227-253.
- 양동훈. (2002). 정치부패의 문제와 민주주의 공고화: 정치체제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36(2):93-112.
- 이갑윤·이현우. (2000a). 16대 총선에서의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한국정치학회 2000년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 \_\_\_\_\_. (2000b).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149-170.
- 이현우. (2011). 제5회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와 유권자 평가. 「선거연구」, 1(1):37-64.
- 조진만. (2001). 낙선운동이 16대 총선에 미친 영향. 「연세사회과학연구」, 7:167-194.
- 정기진·서상윤·이훈영. (2010). 사회균열구조와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후보자 선택 기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마케팅관리연구」, 15(3):71-9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 \_\_\_\_\_. (2010).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 \_\_\_\_\_.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McCann, James A. & Redlawsk, David P. (2006). As voters Head to the Polls, Will They Perceive a "Culture of Corruption?.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9(4): 797-802
- Redlawsk, David P. & McCann, James A. (2005). Popular Interpretation of 'Corruption' and their Partisan Consequences. Political Behavior, 27(3): 261-283.
- Welch, Susan & Hibbing, Jhon R. (1997). The Effects of Charges of Corruption on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1982-1990. The Journal of Politics, 59(1): 226-23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투고일자 : 2012. 11. 07

게재일자 : 2012. 12. 17

국문초록

## 공직선거 후보자의 청렴성은 유권자들의 선택(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19대 총선 사례를 중심으로

이선중(서울시립대)

본 논문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도덕성이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후보자의 소속정당, 범죄경력여부, 세금체납여부가 19대 총선 출마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권자들은 후보의 개인적 능력인 인물요인보다 정당요인에 의하여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보자들의 범죄경력여부나 세금체납여부는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정치부패, 유권자 선택, 후보자의 청렴성